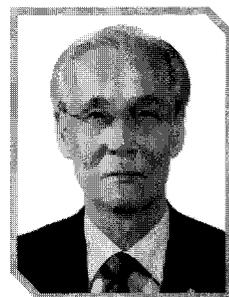


가축복지를 고려한 축산업 준비해야 한다



김기윤
축산경제신문 회장

소의 해인 기축년을 맞으며 축산가족들의 평안과 축산업 발전을 기원했던 시론을 썼던 게 엇그제 같은 느낌인데 벽에 걸린 달력이 달라 한 장 남았다. 어느새 이렇게 흘렀는지,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게 느껴진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경제동물이다. 이러한 농장동물에게도 적용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공포와 시행이 2년째에 접어든 시점에 국내 모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스페셜, 동물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를 다뤘었다.

규모화, 기업화된 육계의 사양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조명했던 TV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격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시청자들이 방송사의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린 느낌 글 가운데는 양계산업계 및 양계산물 가공, 유통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에도 같은 맥락의 주제가 방송돼 파장이 일어났지만 이번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층 격해졌고 충격성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대표적인 대중매체로 꼽히고 있는 만

큼 오늘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야기꾼에 다름 아니다. 전자파를 수단으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케 한다.

실로 많은 사람들을 밤마다 자신 앞에 앉게 만들고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텔레비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사고와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전파하는 이야기는 상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이야기를 찾아서’의 저자로 유명한 윌리엄 R. 화이트는 “어떤 의미에서 텔레비전이 전파하는 이야기는 상업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시청자에게 일정한 관점을 갖도록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 종사자들은 겨울철엔 AI, 봄철엔 구제역 때문에 좌불안석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가축질병과 허술한 안전성 및 위생관리가 경제동물인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생산을 규모화, 기업화 한 축산현장에 얼마나 치명

적이고 육류 및 유·육가공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우리 축산가족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축산업 경영에 가축질병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를 깨달았으며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적극 부응해 왔다.

축산물 생산 및 가공 현장은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환경과 위생 등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칫 오해받기 십상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비춰지는 그림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많다는 얘기가.

축산업 및 축산물 가공업계 종사자들을 당혹케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량산업이요 생명산업인 축산업과 동물보호라는 개념을 텔레비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 이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이다.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지난 2007년에 전면 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 정비가 이뤄졌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를 비롯해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과 동물 학대금지 및 처벌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장동물에 관한 규정 및 조문은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장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을 권장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법 제정 목적과 국제적 추세, 시대의 변화 등을 근거로 농장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거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실정법의 엄정한 집행, 즉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고 지나치다고 본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나 축산물 가공업계 종사자들을 모두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농장동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한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방송이나 보도, 문제 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

현대의 축산기술과 사양관리는 유전적인 형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인 경제동물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가축이 경제동물임을 빌미로 삼아 가축복지 문제를 소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대의 변화는 현재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는 가축복지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키며 국내외 축산업계에 근본적인 조치와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해야 한다. 축산업계는 과학적인 실험결과들을 사양관리에 반영, 가축들에게 적절한 영양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추이와 축산업의 생산성을 감안해 보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가축의 복지문제는 우리 축산

업의 질병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꼭 다뤄야할 사안이다. 우선 개념부터 명확히 하고 올바르게 인식한 가운데 모든 축산인이 관심을 갖고 준비에 참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대안과 기술을 찾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축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시절에는 축산인이 보기도 민망한 축산현장이 사실 전국 곳곳에서 쉽게 목격됐었다. 축산업의 전업화, 기업화가 크게 진전된 이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고는 하나 동물보호법이 무색한 축산현장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 혐오감을 주는 축산현장,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 과밀사육 현장은 우리 축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축전염병 발병의 진원지가 될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곳이다.

가축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돼지, 닭

등 가축의 과밀사육은 생산성과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터전인 축산현장을 뒤흔들고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축방역 관계 당국이 AI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가금류 생산농가 등에게 주의를 요망하는 걸 보니 또 한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신종플루 여파 때문에 바짝 긴장들 했지만 축산업계를 비롯해 배합사료, 동물약품, 축산시설기자재산업 등 관련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큰 사건 사고 없이 기축년을 마감하는 것 같아 무척 다행이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가축복지가 좀 더 고려된 사양관리와 축산업 경영이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